다산포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김세종
다산연구소장

요즘 우리 사회는 불안 불안하기만 하다. 54일째 이어진 기나긴 장마와 폭우가 그렇고,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를 겨냥한 정부 정책에 따른 민심의 동요 등도 그렇다. 특히 이번 폭우와 장마는 삼남(三南)은 말할 것 없고,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에 걸쳐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가 너무나 방대하고 인명 피해가 많아, 수재민과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 깊은 것이 아니다. 또 수개월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엄습하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밖에도 주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근검공렴(勤儉公廉)해야 할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 같아 왠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때 선현의 가르침을 되돌아보면, '성의'와 '믿음'이란 말이 가슴 깊게 다가온다. 정부는 뜻을 진실하게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공자는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묻자, 세 가지 목표를 말한다.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民信之)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경제 안정(足食)이며, 그 다음이 국방(足兵)이다."(논어 '안연편') 이는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말로, 정치는 "국민의 믿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예컨대 국민이 정부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의를 주고 신뢰로 화답해야 한다. 마치 신의(Fidelity)가 믿음을 심는 일이라면, 신뢰(Trust)는 그 결과로서 서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의와 신뢰는 동전의 안과 밖처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 덕목이다. 이 두 가지 덕목에 공통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간이든 또는 정부와 국민 간이든 믿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믿음을 주는 일도 있었지만 불신이 커진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발병의 경우 온 국민의 일심 단결한 모습과 알맞은 조치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당국이 아침저녁으로 신뢰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했던 결과다. 이에 비해 장마와 폭우에 대한 대비와 대처 문제, 부동산 정책,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증폭된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사실관계가 어찌 되었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 주지 못한 것은 정부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예로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라고 했다.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무원 조직이며, 공직자의 불신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빨리 대처할수록 좋다. 의혹은 의혹을 낳고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신의를 가리켜 거센 물살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바위와도 같다고 했다. 신의는 진실을 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일단 어떤 길에 들어서면 어떠한 난관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가 없는 사람이면 무엇을 믿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자기 자신 스스로도 알 수 없을지 모른다.

믿음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근간이다. 정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을 뿐, 행복 그 자체가 실질적 국정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복지(welfare)는 행복의 한 중요 수단으로 물질적·경제적 수단일 뿐 행복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취득한 소득으로 호의호식하기보다 정당한 소득으로 떳떳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임을 알고, 풍족할 경우에도 생활을 즐기되 가난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국가 아니겠는가.

삶에 있어서 일과 놀이의 하모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와 함께 절제와 절약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절제까지 포함한다. 절제와 절약에 바탕을 둔 검소한 삶의 태도는 진정한 청빈의 아름다움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될 것이다.

청춘 톡·톡

폭우 피해, 끝나지 않는 고통

조서희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2학년

50일 이상 이어졌던 장마가 드디어 끝났다. 이번 장마는 1973년 이래 가장 길었고, 내린 비의 양도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장마가 유례없이 길게 지속된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것을 넘어서 폭우와 같은 큰 피해로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장마 피해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막심했다. 농·축산업이 발달한 농촌에서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소와 돼지들이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인해 수많은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수재민들은 집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키웠던 가축들이 죽는 것을 마냥 지켜보며 통탄하고 있다. 대부분 고령이었던 수재민들은 자신의 몸을 건사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이렇듯 폭우와 산사태, 강과 하천으로 인한 범람은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자연재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댐을 방류하는 등의 부수적인 방도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는 동영상과 함께 국민 청원에 참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폭우로 인해 유골함 보관소이자 추모관이 침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제목만 읽으면 폭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피해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글에 첨부돼있는 동영상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직원의 모습이 있었다. 동영상 속 피해자는 "미리 연락했으면 가족들이 나와 물을 퍼내거나 천장을 막았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였다"는 추모관 측의 주장에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 오전 춘천시에서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 감시선, 경찰선 등 선박 세 척이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들 배에 타고 있던 경찰, 춘천시청 공무원 등 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이 같은 비극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고정하고자 했던 인공 수초섬은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춘천시에서 14억 원을 들여 만든 것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주무관의 가족은 사고 당일 블랙 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누군가의 지시 때문에 현장에 나갔으며 절대 자의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수 춘천시장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하게 묻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쓸려 내려간 집을 되돌릴 수 없으며, 떠내려간 가축들을 살릴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곳이 피해 지역이 될지 예측하여 미리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는 있다. 수재민들을 위해 모금하고, 구호 물품을 보내 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사람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되어 수재민들이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 고

폭우 피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김용철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광주·전남 지역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TV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처참한 수해 현장은 이재민들은 물론 시도민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다. 내리는 비를 막을 방법이야 없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온 수많은 수해 피해 대책들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우로 광주시의 경우 지난 7일(259.5㎜)과 8일(255.5㎜) 이틀 동안 연 강수량(1541㎜)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 광주천이 범람 위기에 직면하고, 황룡강이 넘쳐 선운지구·평동산단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지역은 섬진강 유역 제방이 붕괴돼 구례 등 인근 지역이 침수됐고 곡성 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재해 상황시 지금의 대응 체계는 한계가 있음이 입증됐다. 또한 현재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준들이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선정 기준의 경우 현행 기준은 자연 산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펜션 건설 등을 위해 산지 전용이 허가된 지역은 제외됐다. 한데 이번 호우로 인해 위험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의 부재 역시 피해 확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재난·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이 어떠한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비상시에 어떠한 경로로 어디에 있는 대피소까지 피난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피난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난·재해로부터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 재난·재해를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수도 정비 사업, 빗물 펌프장 및 저류조 증설, 사방댐의 설치, 제방 보의 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재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U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를 경고해 왔다. 향후 우리 지역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해 재난·재해 발생 특성 및 지역의 도시적 특성, 사회·경제적 변화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 방재 계획, 지역 피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아울러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재난·재해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방·방재 전문가 육성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기준들은 안전 최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풍수해, 지진, 지진 해일, 산사태 등 다양한 재난·재해 종류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 및 건축물 신축 제한 등의 제도적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해 종류별로 재해 지도(Hazard Map)를 작성해 공표·활용해야 한다. 재해 지도는 말 그대로 재해의 위험한 정도와 피난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 지도이다. 재해 지도를 활용한다면 홍수의 경우 거주 지역의 최대 침수심, 최대 침수 범위, 비상 시 대피소의 위치, 대피소까지의 피난 경로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유사 시 주민들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해 인간이 거주 및 생활의 안전성을 100%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온 저력과 힘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광주·전남 지역 호우 피해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이 또한 현명하게 극복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대적인 방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社說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 3차유행 시작되나

유흥주점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광주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는 지난 12일부터 16일(검사 판정일 기준) 현재까지 18명인데, 이 중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나 된다. 이와 관련된 자가 격리자도 308명에 이른다.

확진자 중 상당수는 유흥업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유흥업소를 나와 마트와 식당, PC방, 직장 등을 오가는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문제는 '노래방 도우미'라 불리는 유흥 접객원 확진자들이 방문한 유흥업소만 이날 기준 19곳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682개 유흥주점과 클럽에 집합 금지와 시설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확진자가 방문한 유흥주점 18곳도 일시 폐쇄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5곳에 대해선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유흥주점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다시 격상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교회발 코로나와 광주의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에 즈음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 카페, 주점, 시장 등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해 의료시스템의 붕괴 및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했다.

이제 우리 모두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다잡아야 할 때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최상의 예방법임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아울러 상무지구 유흥주점 방문자들도 익명 검사가 허용된다니 주저 없이 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섬진강 수해 계기로 '홍수 통제 인력' 보강을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낸 구례·곡성 등 섬진강 유역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댐 수위 조절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아홉 개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 소속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홍수 통제 업무 담당 직원이 고작 네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인원은 모두 30명인데 이 가운데 홍수 통제를 담당하는 예보 통제과의 직원은 단 네 명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하천법에 따라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고 호남권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 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 때문에 60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7~8일에도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댐 관리자로부터 수량 유입 상태와 수위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한편으로 섬진강댐 등 아홉 개 댐의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등 버거운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처럼 취약한 인적 구조는 그동안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이 수질 관리와 이용에만 쏠리면서 홍수 통제 업무를 맡은 인력과 조직이 대폭 축소된 데서 비롯됐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됐던 섬진강 홍수통제소를 2005년 영산강 홍수통제소로 통폐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전국 5대 강 중 유일하게 섬진강만 홍수통제소가 없는 실정이다.

광주일보의 이러한 지적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제 구례군청을 찾은 자리에서 "섬진강 홍수통제소를 최우선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 물난리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물 관리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통합당의 쇄신

미래통합당의 '쇄신 드라이브'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는 최근 새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담은 일이다. 그동안 광주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폄훼했었던 미래통합당 전신 정당들의 전력을 볼 때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기본소득 보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넣는 등 '약자와의 동행'도 구체화했다. 영남·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호남 및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국 정당화를 이루고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통합당의 호남 공략을 위한 '서진(西進) 정책'은 구체화되고 있다. 당내 '투 톱'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당원들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등을 방문,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또 당내에 호남 배려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당내에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점에서 호남과 연고가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명예 의원제'를 도입, 호남 현안을 챙긴다는 방침도 세웠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 등 당내 지도부는 내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국민 통합 강조 메시지'도 준비 중이라 한다. 5·18 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도 나설 예정인데,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호남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에도 호남 민심은 아직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다. 이들의 '호남 끌어안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며 정치적 수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진정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폄훼를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들에 대한 입법 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통합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 주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호남 민심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